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행

국회 환노위 야당 의원 10명 전원 동의로 직회부 의결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노란봉투법 직회부는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단독 투표로 진행됐고, 재적 10명 의원 전원 동의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은 환노위 전체회의 개의 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제출해 노란봉투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사유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유없이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영진 민주당 간사는 "대체토론 및 현안질의에 앞서 4월 26일 환노위에서 전해철 위원장께서 법사위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관한 진전된 논의를 요청했고, 상당한 시간을 부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20일 통과된 이후 90일 경과됐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논의 결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국회법에 따라 60일이 경과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부의를 통해 이 법에 대한 결정을 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여름 하청노동자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5명의 월 임금이 200만원이다. 노동자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며 "법사위의 보이콧에 의해 위원회 법안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직회부해달라"고 말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합의해내고 찬성하는 의견 있으면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김남국 코인게이트,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가지고 국면전환용으로 하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안 맞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상임위원들이 입법 과정에서 충실하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견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말 급한거나, 전쟁이 났거나 위급상황이면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법사위가 업무 해태한 것을 왜 우리 환노위가 책임져야 하나"며 반발했다.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은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는 것이 주된 책무"라며 "저는 수없이 얘기했다. 정부에게도 얘기했다. 답이 있어야만 우리가 책임지는 입법부다. 그랬는데 6개월간 답이 없었다. 미흡한 것은 인정한다. 충분하게 정부 의견 반영 안 되고, 여당 의견이 반영 안 된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적어도 대법 판례가 있으면 입법부로서는 결론을 내야 한다"며 의사일정을 변경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일정 변경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고, 야당 의원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노란봉투법 직회부 안건을 우선 표결하게 됐다.

이어 비밀투표로 진행된 노란봉투법 직회부 안건도 야당 의원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게 됐다.

김영진 간사는 표결에 앞서 "오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사실을 왜곡하는 형태의 일부를 호도하는 형태 때문에 말씀드린다. 국힘 법사위원들이 한번도 노조법 2·3조에 대해 논의 안 했다. 5월 임시국회에서 한 번도 논의 안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체계자구심사도 안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4월26일 전해철이 법사위에서의 실제적인 논의를 요청했음에도 진행되지 않았다. 임무 방기한 채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고 비난·비방하는 국힘 법사위, 환노위원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새만금 에너지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준공 24일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2공구에서 새만금 에너지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준공식이 열린 가운데,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정운천 국회의원,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김미정 군산시 부시장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컷팅을 하고 있다.

"청년농어업인 연령기준 45세 미만으로 확대해야"

권요안 도의원,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키로
고령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 현실 반영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기준을 45세 미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은 제4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 후계청년농어업법은 청년농어업인을 '4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청년농 대상 정책사업은 농어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40세 미만' 기준을 적용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중위연령이 2003년 33.5세에서 2013년 39.7세, 2023년 45.6세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농어촌 지역은 농가 인구 2명 중 1명이 고령인데다 농가경영주 평균 연령이 68세인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게 지금 농어촌의 현실이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권 의원은 "달라진 인구 구조와 농어촌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40~50대가 청년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각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청년농어업인의 기준을 크게 상향하는 추세"인데, "전북을 비롯해 세종, 경남, 제주는 청년농어업인을 45세 미만으로 정했고,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강원 평창, 충북 옥천, 전북 익산·장수는 50세 미만으로 나이 상한을 높여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 의원은 "정부의 청년농어업인 지원 기준과 지자체 기준이 최대 10살이 차이가 나다보니 40대 농어업인은 농어촌 지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의 청년농어업인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청년농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정책 수혜자인 40대 미만 청년농어업인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어 얼마나 정책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권 의원은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지키기 위해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기준을 기존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청년 영농정착 지원 규모 확대 및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권요안 의원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촌 지역이 소멸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권요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오는 26일 전북도의회 제400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檢, '2021 민주 전대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동시 구속영장 청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현역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자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2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전 대표 캠프 관련자와 함께 현역의원 10~20명을 포함해 지역본부장 및 지역상황실장 수십명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시·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 등과 공모해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하기 위한 자금 1000만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전 감사가 지인 등을 통해 총 6000만원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했다.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씨는 검찰에서 송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모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6000만원은 박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거쳐 300만원씩 봉투에 나눠 담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서 이 돈을 받아 현역의원 10~20명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의원이 2021년 4월28일께 이 전 부총장에게 "내가 그게 다섯 명이 빠졌더라고 안 나와갖고. 오늘 빨리. 그래야지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이라고 말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지난 22일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윤 의원은 조사 후 입장문을 통해 "의원들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 권유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음을 이미 여러차례 명백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도 지난 19일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돈을 준 사실이 없다. 전달한 사실이 없다. 검찰 수사가 마치 짜여진 각본에 의한 답이 정해진 결론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뉴시스

29일부터 전북 청소년 열린 토론대회 참가 신청접수

전북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3 전북 청소년 열린 토론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대회는 청소년의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성숙한 토론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예선 찬·반 논제는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의원정수 확대이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2인 1팀을 구성해 오는 29일부터 6월 19일까지 참가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이메일(jbelection@naver.com)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신청방법 등은 전북선관위 홈페이지(http://jb.n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대회의 예선은 중등부와 고등부 각각 참가자들이 제출한 개요서 및 동영상으로 비대면 심사를 진행해 각 부별로 본선 진출 4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본선은 7월 22일 전북선관위 대회의실에서 각 부별로 토너먼트 대면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각 부별 금상 1팀에게는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과 상금 50만원이 수여되며, 은상 1팀과 동상 2팀에게는 토론위원장상과 각 30만원, 1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김재훈 기자